

## 민주 전남지사 3인 경선 확정 광주시장 3자 단일화후 결정

지방선거 대진표 윤곽

박지원 전남지사 출마 촉각

민주 광주·전남 내주 경선

평화·바른미래 인물난 고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광역단체장 선거 단수후보와 경선후보를 각각 발표하면서 광주시장 선거와 전남지사 선거 경쟁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강기정·민형배·양향자·윤장현·이병훈·이용섭·최영호 후보 등 7명이 경쟁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일화에 나선 강기정·민형배·최영호 후보의 결정을 보고 컷오프(배제) 및 경선 대상자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민·최 후보는 4일 오전 단일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민주당 중앙당은 이르면 4일 오후 늦어도 5일 중에 남은 5명 후보 중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날 내내 서울과 광주 정가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특정 후보의 컷오프설이 퍼지면서 중앙당 측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3인 경선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1차 경선에서 선두 후보가 득표율 50%를 넘겨 결선투표를 무산시킬 수 있을지, 결선투표가 실시돼 예초 2위 후보가 역전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후보가 많은 민주당과 달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인물난으로 아직도 광주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경우 현역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에서 나경제 전 정의당 공동대표가, 민중당에서 윤민호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장위원장이 각각 진보진영의 세 확산을 위해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이날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장만재 전 전남 교육감 3명이 경선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호남에 기반을 둔 평화당의 경우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계속 거론된다. 하지만, 공동교섭단체 의석 20석 유지 문제가 있어서 출마 선택의 변수가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전남지사 후보를 내기 위해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중당은 민노총 기획실장 출신인 이성수 예비후보가 이미 표발을 누리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주 내에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지역별로 경선을 하기로 했다. 지역별 경선 순서는 호남부터 시작해 수도권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광주와 전남은 다음주 중 경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48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같은 선거인단이 결선투표를 한다.

구체적 경선 일정은 4일 열리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북합동공연 '우리는 하나' 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합동공연 '우리는 하나' 공연을 마친 출연진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靑 “한반도 비핵화,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타결”

“큰 방향의 결정된 것 없어”

청와대는 3일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괄적이고 단계적 방식으로 타결한다는 큰 방향 외에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다”며 “그 방향에 따라 기본 전략과 로드맵이 준비되고 이후 협의 과정 필요하다. 현재는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틀을 잡아야 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 있다”며 “모든 게 상태가 있어 일단 만나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수준의 공감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추후 논의의 과정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분리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합의는 할 수밖에 없고 그 합의 이행 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에서 경제 제재 해제 등 중간 과정이 있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 이후 수교가 이뤄졌지만 그 단계가 여러 과정이라는 것”이라며 “결국 타결과 이행과정은 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비핵화 방식에 대한 협의는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문제는 북미 간 포괄적 타결 이후 진행될 수 있고, 지금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식이 과거 제네바 합의나 9·19 선언 등과 다른 부분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바텀 업’이 아니고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합의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탑-다운 방식으로 합의하면 포괄적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를 검증할 것인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며 “포괄적 타결이 이뤄지고 CVID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으로 가기 위한 방식은 서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그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준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협의 여부와 관련, 그는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다”며 “북미가 다양한 협상안을 준비하겠지만 우리는 나름의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양측과 협의해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 6일 박근혜 1심 선고 TV로 본다

재판부 생중계 허가 결정

박근혜 재판 불참 가능성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사상 첫 중계가 결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 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간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공익 달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보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도시와 피부 사이  
빈틈없는 시티 선크어  
헤라 선 메이트 프로텍터

HERA  
SUN MATE PROTECTOR  
SPF 50 PA+++  
C.U.T. System  
Control of UV Top

•전국 백화점 및 이모레카운셀러를 통해 구입가능합니다  
•홈페이지: https://www.hera.com •고객상담실: 080-023-5454